

제74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필기시험  
【총평 + 문제 + 해설】

**【제74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필기시험 총평】**

**■ 분야별 출제 구분 ■**

구 분	문항 수	문항 번호
경찰학의 기초이론	10문	01, 02, 03, 04, 05, 06, 07, 09, 09. 12
한국·외국경찰사	2문	10, 11
경찰행정법 (조직·공무원·작용·구제)	13문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경찰행정학	7문	13, 14, 29, 30, 31, 32, 33
분야별 경찰활동	8문	27, 34, 35, 36, 37, 38, 39, 40
복수정답 가능	34번	112치안종합상황실(과거 규정이 언급) - 향후 이익제기 예정

**■ 전체 총평 ■**

- ① 85점 이상일 경우 충분히 합격권으로 평가되며,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권에 근접해 볼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어디서든 고수들은 존재한다).
- ② 시험의 난이도는 中上으로 평가된다. 하급 문제도 일부 있었으나, 고급 문제와 中급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의 사고를 필요로 하였다.
- ③ 출제위원의 의도를 살펴보면, 핵심은 변별력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숙지한 사람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출제의도가 보인다.

**■ 대표적인 특징 ■**

- ① 기출지문 기반, 기출지문의 변형, 법령 조문의 지엽적 부분, 새로운 판례 등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 ② 행정법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필자가 강조해 왔던 전통적인 경찰학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찰학은 행정법이 아니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가 대거 출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 ④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내외 출제되었고, 이는 서진호 경찰학 적중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⑤ 2024 서진호 경찰학 커리큘럼에서 기본서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3번 문제와 새로운 판례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 향후 공부방법론 ■**

- ①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최소한의 부분만 숙지하기를 바란다(서진호 경찰학 핵심출제 예상판례 참조).
- ② 기출에 충실하되, 지속적이고 꾸준한 모의고사 응시로 실전감각을 높여야 한다. 다만, 모의고사 활용은 행정법의 지나친 출제가 담긴 모의고사가 아닌, 기존의 경찰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은 함정지문으로 변형한 모의고사가 좋다.
- ③ 항상 지문을 꼼꼼히 읽는 공부를 하면서, 함정으로 변형될 수 있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시험도 필자가 강조한 함정 포인트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01. 경찰개념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 ②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다.
-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④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종래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인 비경찰화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보안경찰사무 ×)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제외 ×)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③ (×)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보기의 내용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④ (○) 미군정시대에 경찰의 치안유지기능 이외의 기능을 다른 행정관서로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을 실시하여 경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위생경찰을 위생국으로 이관, 경제경찰 및 고등경찰의 폐지, 소방업무를 시·읍·면·동의 소방부로 이관 등이 행해졌다.

0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 (○) 원칙적으로 경찰행정관청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광의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지역관할의 예외)이 따른다.

나.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포함)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화재·전염병의 발생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다. (○)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9조 제1항).

- ①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 ②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라.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의 대상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체포·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할 경우에는 소환을 요구하거나 추방조치를 취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

03.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법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마”는 옳은 설명이며,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이다. 보안경찰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예 :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소방경찰, 풍속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되어 주로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예 : 영업경찰,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보건경찰 등).

나.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질서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이라는 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예 : 범죄수사 및 진압, 즉시강제, 강제처분, 강제집행, 통고처분 등). 봉사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이 아닌 비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치안서비스·계몽·지도 등을 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예 : 생활안전순찰, 방법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방법순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

다.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예방경찰이란, 경찰상 각종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예 : 순찰활동, 보호조치,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 및 취급 제한 등). 진압경찰이란, 이미 발생한 범죄 및 각종 위해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예 : 범죄수사·범인체포, 광견의 사살 등).

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한의 유지 및 책임소재에 따른 분류이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자치경찰은 전국적인 기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마.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른 분류이다. 1795년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구분하였다.

04.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협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가”, “라”, “마”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이며,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나. (×)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법익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이다.

다. (×) 위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현실성에 따른 분류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추정적 위험 ×)
인식에 따른 분류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

라. (○)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로 인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인 공공의 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마. (○)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추세에 따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변화되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치안서비스의 강화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단이 개척되고 있다.

05. 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② 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 ③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하나 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 ④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① (○) 협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② (×)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예 :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 보건경찰, 공물경찰 등).

③ (○) 경찰긴급권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 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법령상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질서위반의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일반경찰권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의회경찰과 법정경찰은 협의의 경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0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4호).

② (×)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경찰청 관·국의 장을 말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5호). 경찰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

④ (○)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07. 경찰 기본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다.
- ②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③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 ④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정이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①, ③ (○) 민주성이란,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조직의 민주화	경찰기관 법정주의,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직업경찰공무원제도가 인정된다.
작용의 민주화	실질적 법치주의, 경찰책임의 인정, 경찰통제와 경찰구제제도가 인정된다.
대외적 민주화	① <b>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가 인정</b> 된다(예 :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등). ② <b>경찰활동의 공개가 인정</b> 된다(예 :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대내적 민주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에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 합법성(법치주의)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④ (○) 인권존중주의란,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08.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권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②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④ 전문직업화를 위해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②, ④ (○)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부권주의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의 판단으로 대신하려는 윤리적 문제점을 의미한다. ㉡ <b>부권주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b>
사적 이용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힘을 소유하고, 그 힘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기도 한다.
차 별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b>경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현상</b> ).
소 외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인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말한다( <b>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함</b> ).

③ (×)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힘을 소유하고, 그 힘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기도 한다(공공의 이익에만 이용한다 ×)**.

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함을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2항).

② (○)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3항).

③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6항).

④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5항).

10.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인물과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나석주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나. 김 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 다. 김용원 :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 라. 김 철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 (○) 나석주 의사는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지 수탈의 핵심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 (○) 김석 선생은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다. (○) 김용원 열사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지병으로 인하여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 및 보석을 반복하다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였다.

라. (○) 김철 선생은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다. 1932년 상하이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 및 감금되었고, 이후 석방되었으나 1934년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11. 영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829년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의 제의로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 ② 1964년 「경찰법」을 통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3원 체제를 설정하였다.
- ③ 2002년 「경찰개혁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④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4원 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1829년 '영국 근대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필(Robert Peel)의 제안으로 제정된 「수도경찰법」에 따라 수도경찰청이 설립**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경찰청장이 되었다.

② (○) **왕립경찰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1964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영국경찰은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당 시기에 매우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의 3원 체계(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가 설정**된다. 현재는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의 4원 체계(내무부장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로 변경·운영되고 있다.

③ (×) **2002년 「경찰개혁법」을 제정하여 지방경찰활동계획의 작성을 지방경찰위원회에 부과하고,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제한적 경찰권을 부여하면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④ (○)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경찰기관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4원 체계(내무부장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로 변화**된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찰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다.
- ②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찰관들이 확인된 범죄문제에 대해 조직화된 순찰전략을 개발·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적 기능을 연결하고자 시도한다.
- ③ 범죄자의 활동과 조직범죄집단·중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예방 등에 초점을 두며 증가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 ④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③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의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은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범죄의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 경찰의 전문적인 범죄진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내 용	㉣ 관할구역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직업적 범죄자들과 조직범죄들을 그 목표로 한다. ㉤ 광역성 범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관할을 담당하는 특별수사대, 전문 수사반 등을 이용한다. ㉥ 지역사회의 참여가 경찰의 중요한 측면임을 인식하고, 법집행을 한다.

②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④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이 사건에 토대를 둔 반응전략에서 문제지향적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를 구분할 때,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분산 : 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
- ② 정보의 공개 :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독선과 부패는 억제될 수 있다.
- ③ 인권의 보호 : 경찰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④ 참여의 보장 :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 경찰행정통제의 기본요소

경찰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인권보호는 경찰행정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

권한의 분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간의 권한 분산
정보의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국민의 참여	경찰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책임의 추궁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민사책임 및 징계책임
피드백	경찰행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14. 경찰홍보의 유형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는 인쇄매체, 유인물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나)는 단순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중매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 | (가)            | (나)                     |
|----------------|-------------------------|
| ① 협의의 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② 협의의 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 ③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④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가”는 공공관계(PR - 협의의 홍보)를 의미하며, “나”는 대중매체관계(MR)를 의미한다.

가. 공공관계(Public Relations : PR)란 유인물, 인쇄매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다.

나.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MR)란 종합적인 홍보활동으로 신문·방송 및 영상물 등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중매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③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

- 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암기 TIP : 경검국군 3년)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가”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나.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보기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라.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시·도경찰청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18.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x)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② (○)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둔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③ (○)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④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후문).

19.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난이도】 上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가”, “나”, “라”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나. 라 (○) 경찰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①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호와 제6호는 아래의 경우에만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수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횡령·배임의 경우만 해당)**

② 사망한 경우

③ 연령정년(60세)에 도달한 경우

④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우

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다만,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수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횡령·배임의 경우만 해당**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비상근무 음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15일 이내 ×)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② (×)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철야근무자 ×)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 ㉡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③ (×) 비상근무 음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보기의 내용은 비상근무 병호에 대한 설명이다.

④ (○)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2호).

**21.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②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워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점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경우에,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면 제1종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된다.

【정답】 ④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2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법 규정과 판례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질문시 경찰관은 제복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제복착용 경찰관들이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고, 피검문자들이 경찰관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② (○)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③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④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23.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 (○) 경찰관은 응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나. (○) 경찰관은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다. (○) 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경찰관은 피구호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5항).

라. (○) 해당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6항).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 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① 35      ② 40      ③ 45      ④ 50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가”는 5, “나”는 5, “다”는 40이다. 따라서  $5 + 5 + 40 = 50$ 이다.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6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2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③ (○)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등,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④ (×)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0미터 이하 : 3바(bar) 이하
- ㉡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 5바(bar) 이하
- ㉢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 7바(bar) 이하
- ㉣ 25미터 초과 : 13바(bar) 이하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의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다”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경찰서장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즉, **즉결심판의 대상이다**.

-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나.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3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라. (×)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고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범의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2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 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이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② (○)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 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이 개시·계속 혹은 추적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 甲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乙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甲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乙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임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①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계층에 따라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③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 ④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며 업무의 세분화로 인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계층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②, ③ (○) 계층제(hierarchy)의 원리란 카탈릭의 교권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함으로써, 상·하 계층간에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도록 조직하는 원리를 말한다. 즉,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직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계층제의 원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b>장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령·지시, 권한의 위임이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li> <li>㉡ 경찰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통로가 된다.</li> <li>㉢ 조직 내의 분쟁·갈등의 해결·조정과 내부통제의 확보수단이 된다.</li> <li>㉣ 지휘·감독을 통하여 경찰의 질서유지와 조직의 일체감·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li> <li>㉤ 명령과 지시를 통해 경찰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li> <li>㉥ 경찰승진의 경로가 되어 사기를 진작시킨다.</li> <li>㉦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li> </ul>
<b>단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동태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저해한다.</li> <li>② 환경변화에 신속성 있게 적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li> <li>③ 업무처리 과정이 지연되어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li> <li>④ 의사전달의 지연·왜곡이 가능하고, 하의상달이 곤란하다.</li> <li>⑤ 계층제를 비합리적인 인간지배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쉽다.</li> <li>⑥ 조직 간 갈등으로 인한 조직할거주의를 초래한다(부서이기주의).</li> <li>⑦ 기관장의 독단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li> </ul>

④ (×) 보기의 내용은 전문화(Specialization)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3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비교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이 양성에 유리하다.
- 나.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의 횡적 협조에 용이하다.
- 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라. 계급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 마.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바.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모두 틀린 설명이다.

가. (×)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일반행정가 ×) 양성에 유리하다.

나. 다.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 점	①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② 임용과 인사배치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③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④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단 점	① 인사배치에 있어서 비신축적이다. ② 직책에 따른 전문화로 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등에 있어 의사소통이 곤란할 수 있다. ③ 신분의 불안정성이 야기된다.

라. 마. 바. (×) 계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라”와 “마”의 경우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장 점	① 신분보장의 강화로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②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적응성을 통한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용이하다.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단 점	① 행정의 전문화가 곤란할 수 있다. ② 계급의 폐쇄화에 따른 상호 배타적인 차별적 긴장과 갈등이 유발된다. ③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

**3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의 재량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유용 및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나 단위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 ③ 자본예산제도는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품목별 예산(Line - Item Budget)은 지출의 대상 및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량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li> <li>㉡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li> <li>㉢ 합법성에 치중하는 재정통제 및 회계검사가 용이하다.</li> <li>㉣ <u>행정관료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부정과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u></li> <li>㉤ 경비 사용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편성되므로 지출에 따른 성과의 측정이 곤란하다.</li> <li>㉡ 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지출의 융통성 있는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li> <li>㉢ 재정적 지출과 기관목표의 실질적 달성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li> <li>㉣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계획과 지출이 일치되지 못한다.</li> <li>㉤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인해 정부 전체 활동의 통합조정 필요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li> </ul>

② (○)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은 예산의 통제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성과에 초점을 두며, 업무단위에 따른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하여 관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사업계획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u></li> <li>㉡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li> <li>㉢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li> <li>㉣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다.</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단위원가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u></li> <li>㉡ 입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li> <li>㉢ 인건비 같은 고정성 경비에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li> <li>㉣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어렵다.</li> </ul>

③ (×) 보기의 내용은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④ (×) 영기준 예산(Zero - Base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책정하는 예산을 탈피하여, 전년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효과성·중요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에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적 계획이 아닌, 단기적 계획에 중점을 둔다.

3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공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공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② (○)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③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④ (○)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구분 및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3년마다 ×)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8조 제1항).

② (×) 감찰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설치·운영한다 ×)(「경찰 감찰 규칙」 제22조 제1항).

- ㉠ 감찰정보의 구분
- ㉡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

③ (×)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할 수 없다 ×)(「경찰 감찰 규칙」 제35조 제1항).

④ (○)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경찰 감찰 규칙」 제35조 제4항).

3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 ②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③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또는 code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답】 가답안은 2번이지만, 복수정답 처리 가능성이 있음

【난이도】 下

【해설】 가답안은 2번이지만, 복수정답 처리 가능성이 있음(서진호 강사 이의제기 예정)

① (×) 출동 경찰관(과거 규정에 의하면 출동요소)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② (?)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즉, 과거에는 해당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는 규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답안의 정답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③ (×)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접수한다(「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④ (×)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코드 3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 또는 112신고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 제2항).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가”, “나”는 옳은 설명이며,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다.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4항).

라. (×)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3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X) 나.(X) 다.(O) 라.(O)      ④ 가.(X) 나.(O) 다.(O) 라.(X)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다”, “라”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라. (○)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37.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2항).

②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2항).

③ (×) 청원주(시·도경찰청장 ×)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④ (○)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

-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38.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제외한다.
- ②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외교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는 제외 ×)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② (○)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14조 제2항).

③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 ×)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 ×)과 협의할 수 있다(협의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6조 제1항).

39.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가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나 )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 다 )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   | (가)     | (나)     | (다)  |
|---|---------|---------|------|
| ① | 경찰서장    | 시장등     | 경찰청장 |
| ② | 시·도경찰청장 | 경찰청장    | 시장등  |
| ③ | 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 경찰청장 |
| ④ | 시·도경찰청장 | 시장등     | 경찰청장 |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가”는 경찰서장, “나”는 시장등, “다”는 경찰청장이다.

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이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④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의 대오(경찰관을 배치하여 줄 지어 세우는 것)나 차량을 이용한 차벽은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도경계석·차선 등 지상물은 질서유지선이 될 수 있다. 경찰관이 띠 등을 가지고 줄지어 서 있는 형태의 질서유지선은 활용 가능하다.

②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그 밖에 안전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④ (×)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